
정책참고자료

2016-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	4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	9
2	국민권익위원회		
	’15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12개 → 44개로 증가	—————	12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18
4	교육부		
	청소년 창업 동아리, 기업가정신을 겨루다	—————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추가전환	—————	28
5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성과의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모집	—————	36
	평창동계올림픽 D-2년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	38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	—————	43
	문체부, ‘체육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	45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 발굴	—————	50
	농관원, GAP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	53

8	환경부		
		환경부, 축축한 물 순환 선도도시 3곳 선정한다	59
9	고용노동부		
		평생 현역을 응원합니다! 인생이모작을 위한 생애설계서비스 지원	66
10	여성가족부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역량 강화	69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 - 지자체 공모로 1만8천호 선정, 전국 210곳에 11만호 행복주택 입지확정 -	75
12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대책 시행 - 범정부 해사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계절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 -	81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 다부처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7일 오후 2시부터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합동으로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획연구(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환으로 열리는데,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별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부처 공동 기획연구를 통한 부처간 협력 및 공동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가뭄 대응은 예측부터 수자원 활용,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되어 통합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 위의 기획연구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극한상황의 대가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피해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및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의 개발기술 및 전문기능을 기반으로 가뭄정보 공유 및 표준화, 유기적 대응정책 마련 등 범부처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붙임 : 심포지엄 추진계획(초청장), 가뭄기획연구 설명자료

다부처 R&D 공동기획연구

-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 -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반복적인 가뭄피해 발생으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나, 개별 부처차원에서 관리되어 통합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 (사업목표) 선제적 극한가뭄 관리 및 피해저감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가뭄대응기술·전략 고도화 및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 (추진체계) 가뭄관리 연계운영플랫폼 구축(안전처, 국토부)
 - 메가가뭄 예측·대응전략 (안전처)
 - 농업·농촌 가뭄관리 통합시스템(농식품부)
 - 가뭄취약지역 상수원 확보기술(국토부, 환경부)
 - 수문학적 가뭄 및 갈수 예측 고도화 및 수자원 운영기술(국토부)

- 중장기 기상학적 가뭄감시·전망기술(기상청)

2. 세부 사업 내용

① 가뭄관리 연계 운영 플랫폼 구축

- 가뭄정보 연계를 위한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범부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② 가뭄발생 메커니즘 분석

- 가뭄유형 및 메가가뭄 특성에 따른 분석 기술 개발
- 가뭄발생 기준 정립 및 가뭄빈도해석 기술 개발

③ 가뭄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 기후예측정보의 상세화된 시·공간적 정보 제공 기술 개발
- 기후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가뭄관리·전망 기술 개발

④ 가뭄재해 및 피해 정량화 기술 개발

- 중장기 수문학적 가뭄 및 갈수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 가뭄 피해 취약성 평가 및 피해 정량화·영향 분석 기술 개발

⑤ 가뭄관리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및 방안 수립

- 취약지역 수자원 확보 및 수자원시설(댐, 보, 저수지) 운용 기술 개발
- 메가가뭄 확산차단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3. 성과 활용 계획

- (기술활용방안) 「가뭄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정부합동, 2015)에 연계하여 가뭄단계별 부처별 역할에 대한 기술적 활용
 - (평상시) 가뭄전망 및 가뭄재해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부처별 맞춤형 가뭄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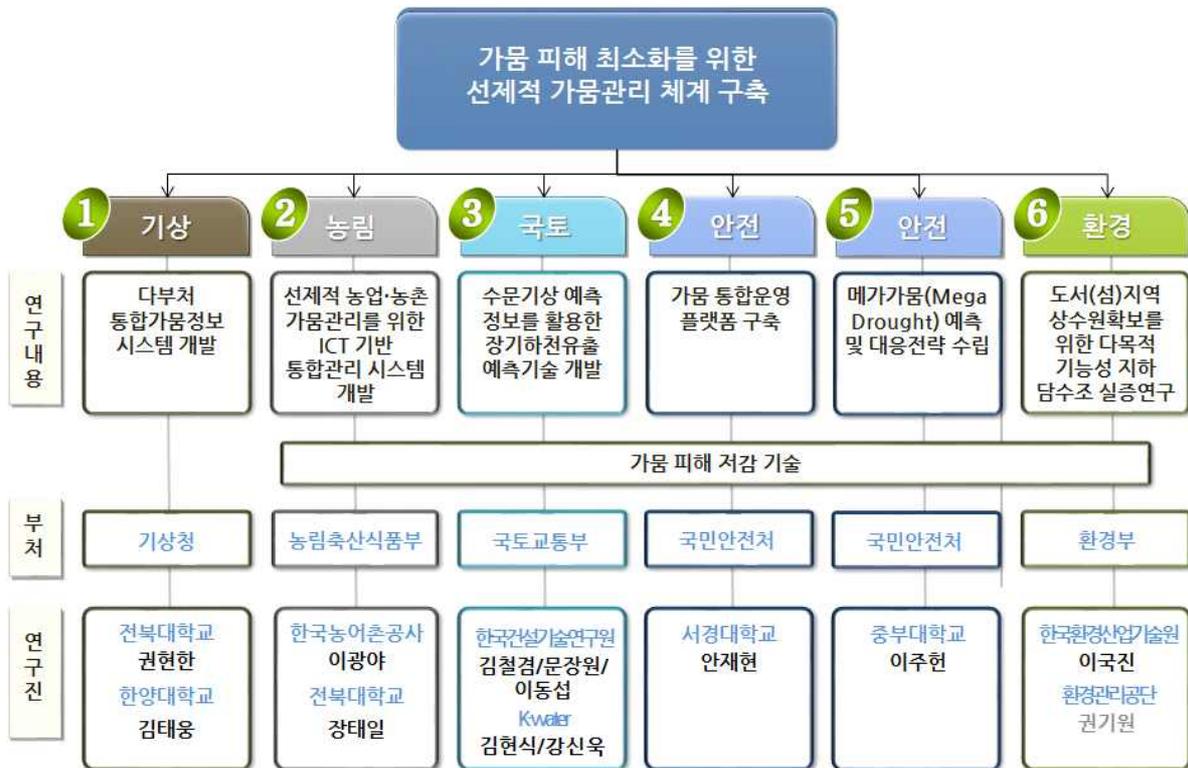
- (재난시) 수자원시설 운영방안 및 용수공급대책을 제시하고 범부처 의사결정 지원

□ (기업참여방안) ICT 및 수자원확보 신기술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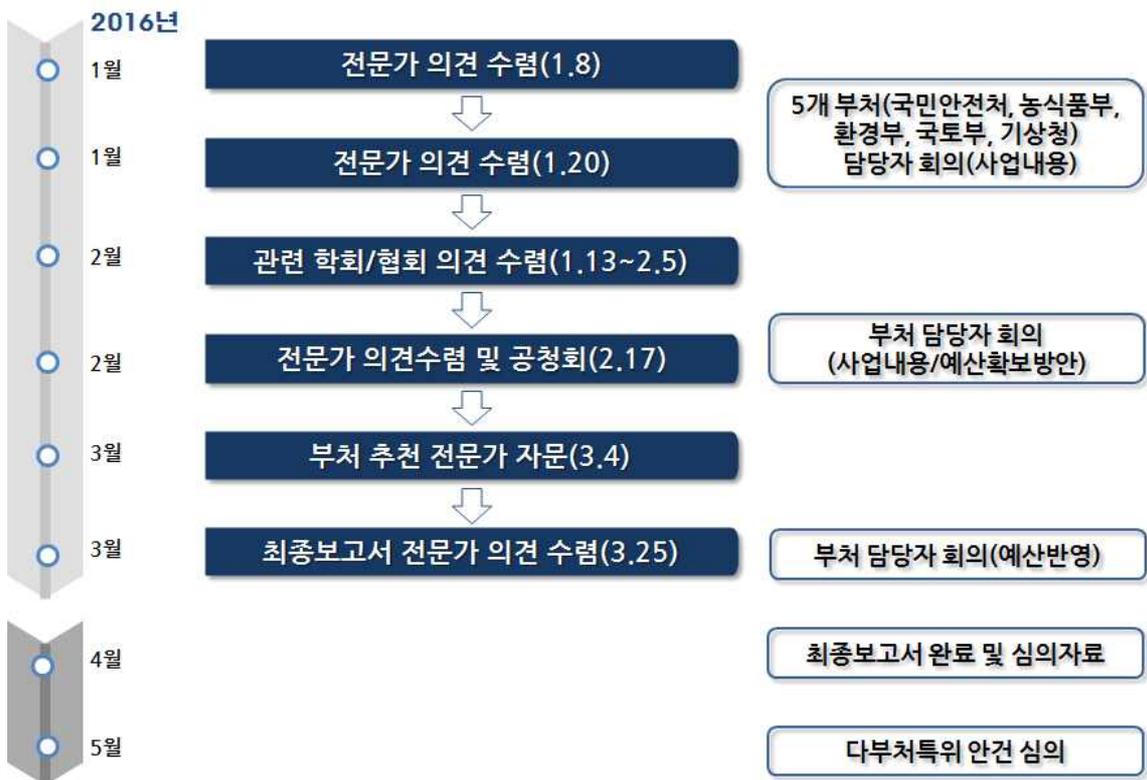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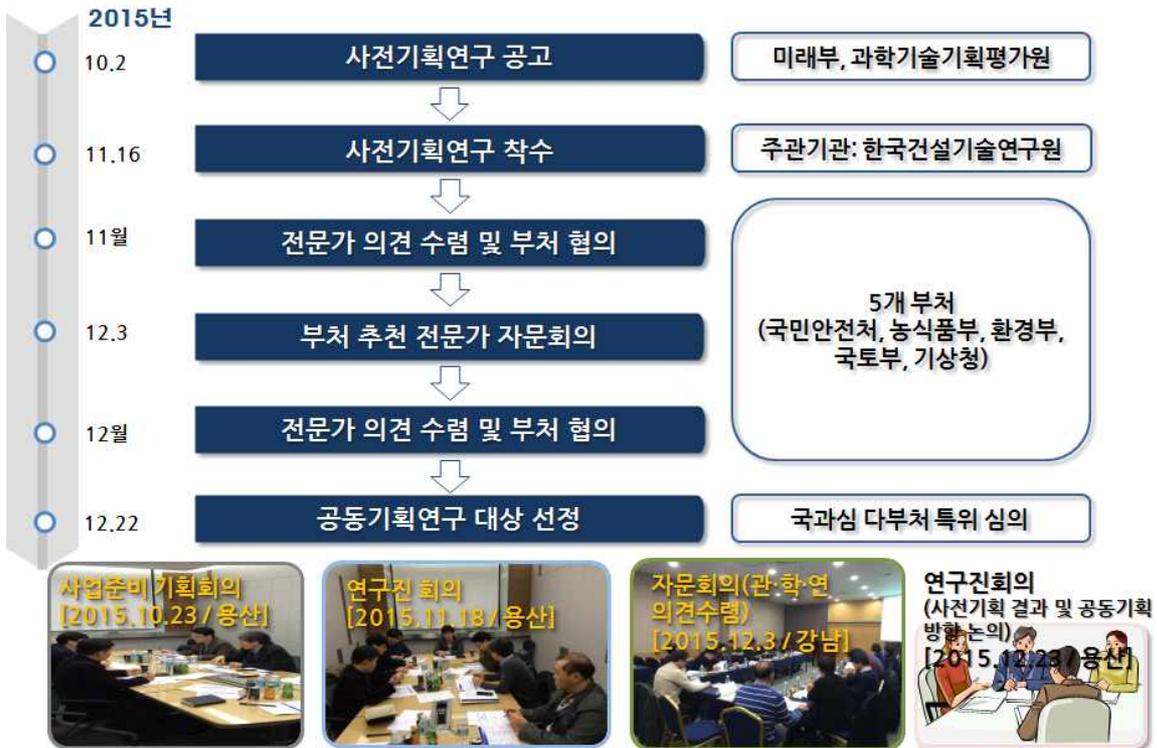
- ICT 기술을 이용한 가뭄정보 모니터링·자료관리·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취약지역에 대한 신개념의 수자원확보 솔루션 개발 및 적용

4.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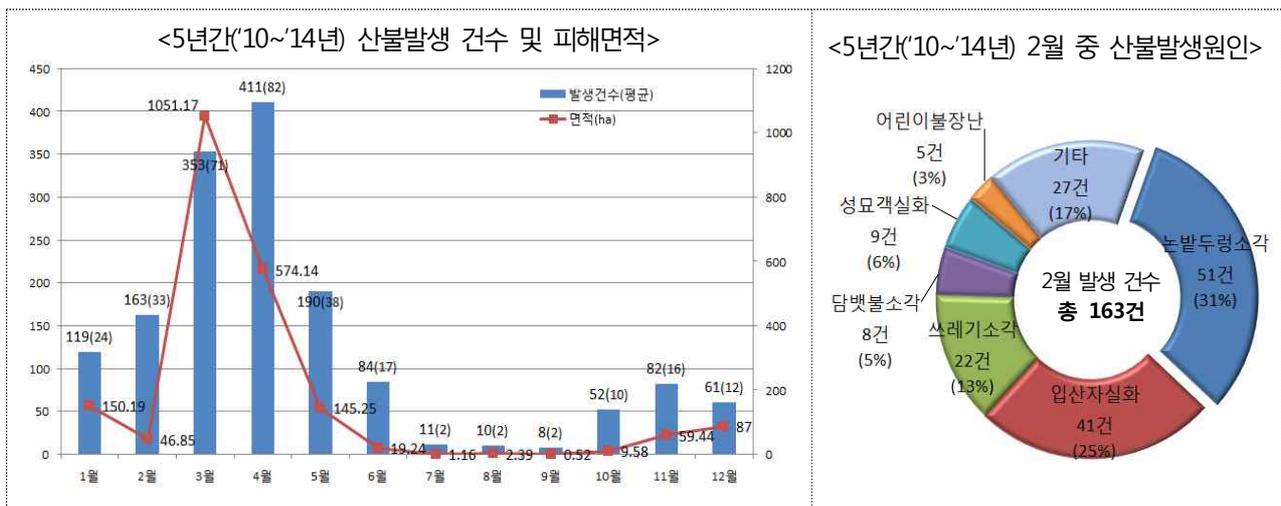
□ 주요 일정



1-2 국민안전처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정월대보름(2.22)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5년(‘10~‘14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08건으로 2월에 10.6%가 (월평균 33건)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여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2월(‘10~‘14년간)에 발생한 산불의 원인으로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가 25%, 쓰레기 소각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 산불은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429ha의 산림을 소실시켜 14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매년 인명피해도 낳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 2014년 1월에는 전남 나주시 양모씨(85, 남)가 농업용 폐비닐을 태우는 중에 불길의 산불로 번지는 것을 혼자서 막으려다 사망하였고,

- 같은 해 2월에는 광주 광산구 나모씨(79, 여)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사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을 놓아 월동중인 해충을 없앤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계속 행해져 왔으나 역효과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만큼 이제 그만 삼가야겠다.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논·밭두렁 태우기 시 해충은 11% 감소하는데 반해,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이 89% 감소하여 오히려 병충해 발생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실질적인 해충방지의 효과가 미미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확대 되어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잃게 할 수 있다” 며 봄철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봄철 산불예방 요령>

- ◇ **산림 안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후 실시
- ◇ **봄철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붙임 1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사고사례

□ 지역별 위험지수 현황

지역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 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서울	30			20			30	10	20	20
부산	30							10	10	10
대구	40						10	10	10	10
인천	40			20			10	20	10	10
광주	40						10	10	10	
대전	40							10	10	
울산	40	10						10	10	10
경기	40						20	10	20	30
강원	50				10			10	10	10
충북	40	10						10	10	10
충남	60	10					10	10	10	10
전북	50	20			10		10	10	10	10
전남	50	20			10			10	10	10
경북	40	10			10		10	10	10	10
경남	40	10		20	10		20	10	20	20
제주	40							10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심		주의			경계			위험	

□ 과거 사고 사례

- '68.2.27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용접 중 화재(사망 7명, 부상 3명)
- '07.2.25 경기 성남 담뱃불 취급부주의 주택화재(부상2명)
- '07.2.26 서울 도봉산 은선암 암벽 부근 산악사고(부상1명)

2-2 국민권익위원회

‘15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12개→44개로 증가
권익위, ‘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 (붙임2) ‘15년도 확인조사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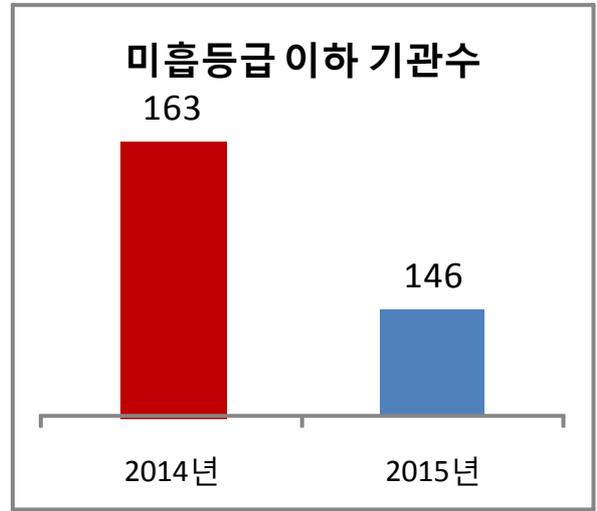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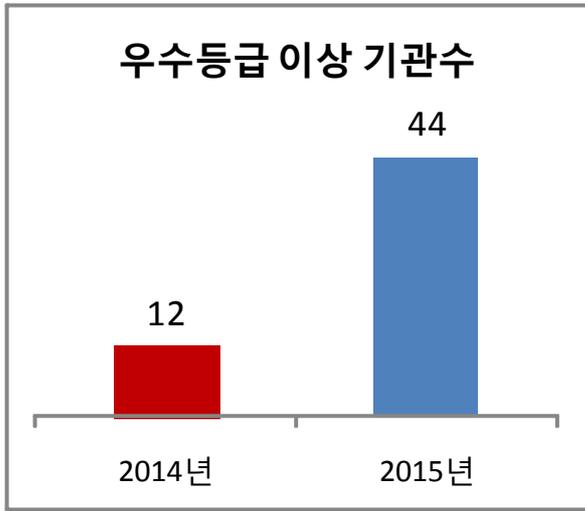
-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 등급제 운영 : 최종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발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95점 이상	85점~95점 미만	75점~85점 미만	65점~75점 미만	65점 미만

-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등급 이상 기관(44개) : 광역시·도(8개), 시(15개), 구(9개), 군(12개)
 미흡등급 이하 기관(146개) : 광역시·도(1개), 시(37개), 구(53개), 군(55개)

-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65.6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전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	구	군
2014년도	71.4	78.7	72	69.4	65.6
2015년도	71.9	83.7	74.1	64.4	65.6
전년대비	▲ 0.5	▲ 5.0	▲ 2.1	▼ 5.0	-

- 종합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 심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음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음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기관별 등급(‘15년도 확인조사 결과)
2. ‘15년도 확인조사 세부지표

붙임 1

기관별 등급(15년도 확인조사 결과)

※ 등급 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 順

구분	광역시·도	시	구	군
최우수 (5개)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 은평구	강원도 횡성군
	2개	1개	1개	1개
우수 (39개)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함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6개	14개	8개	11개
보통 (53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수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하동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8개	23개	7개	15개

구분	광역시·도	시	구	군
미흡 (53개)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영도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강원도 철원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	21개	18개	14개
부진 (93개)	광주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구분	광역시·도	시	구	군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1개	16개	35개	4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공공기관이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

◇ 총 2,700명 수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으로 사회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 정부는 상시·지속적이고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①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기로 하였으며
 - ②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2개 기관 851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직급체계를 부여하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정규직 전환심의 결과 >

(단위 : 명)

분 야	합 계	비정규직→정규직	정규직내 처우개선
합 계(146개)	2,732	1,881	851
공 기 업(11개)	249	229	20
준정부기관(44개)	1,280	762	518
기타공공기관(91개)	1,203	890	313

- 이번 전환계획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활용하도록 하고
 -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활용토록 하는 등 정규직 위주의 인력운용을 통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함과 함께
 -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주요 반영기관 현황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단위 : 명)

기 관 명	반 영	반영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140	건설임대 공급·운영 및 분양전환 등 업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0	보건직, 요양보호사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5	시험평가, 시험인증 관련 연구 인력
부산대학교병원	85	간호, 보건, 행정, 원무 수행 인력 등
국민연금공단	7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등 고유업무 인력
한국환경공단	64	자동차 환경인증, 수질오염 방제체계 운영인력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콜센터 인력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54	공원자원 보호·복원, 안전관리 등 고유업무 인력
근로복지공단	54	물리치료사, 퇴직연금 운용요원 등
승강기안전관리원	49	안전검사·교육, 기술컨설팅 인력 등

(2) 정규직 내 처우개선

(단위 : 명)

기 관 명	반 영	반영 사유
서울대학교병원	66	간호, 보건, 사무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	26	경륜, 경정, 경주운영 업무, 호텔운영 등 인력
국제방송교류재단	50	방송제작, 홍보, 영업, 관리행정, 운전 인력
특허정보진흥센터	50	선행기술 조사, 특허분류 업무 인력
소상공인진흥재단	43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
노사발전재단	40	생애설계, 재취업 상담·교육, 구직알선 등 인력
우체국금융개발원	39	보험심사, 보험조사, 민원처리 등 인력
시설안전공단	30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창업진흥원	2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사업화 지원 등 인력
한국고용정보원	14	정보시스템 운영, 연구사업 관리, 행정 등 인력

청소년 창업 동아리, 기업가정신을 겨루다! -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개최-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월 18일(목) 국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중·고교 창업 자율동아리 축제인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YEEP)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국정과제인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개발·운영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2015년 시범운영: 211개교, 25,474명 참여)

- 금번 경진대회는 창업 관련 자율동아리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및 청소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이번 창업경진대회에는 온라인 활동점수 및 심사위원 평가로 실시된 1차 예선(총 141개)을 거쳐, 최종 선발된 자율동아리 30팀(중 10개, 고 20개)이 참여하였다.
 - 본선에 진출한 상위 30팀에게는 활동비(50만원)와 국제지식등록(IKR) 기회 등을 부여하고 창업경진대회 참가 준비를 지원하였다.
- 이번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창업아이템을 소개하고, 동아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창업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대회 참가학생들은 창업결과물(시제품 또는 계획서 등)에 대해 일반참가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들의 평가 및 투자의향서를 받는 등 가

상 시장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 특히, 참가학생들에게는 국내·외 특허·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전문가*로부터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멘토링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 국민대학교 LINC사업단, LG생활건강, 국제지적재산권산업화협회 등

- 경진대회 결과, 우수동아리 10팀에게 교육부장관상(2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2팀), 기업가정신상(2팀), 협업상(2팀), 미래가치상(1팀), 혁신상(1팀)이 각각 수여된다.

- 교육부 이영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설계,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또한, 2016년에는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및 창업경진대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요

- 목적 : 청소년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
 - YEEP 시범사업 참여 동아리의 창업 실전(exercise)을 통한 창업 마인드 및 창업문화 고취
 - 학교현장 교사 및 학생의 YEEP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장려
- 일시/장소 : 2016년 2월 18일 10:30~17:00 / 국민대 실내체육관(서울)
 - ※ 본 행사(일반인 참가): 13:30~17:00
- 주최/주관/후원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중소기업청
- 참석자 : 30개 중·고 동아리 지도교사 및 학생, 교육부, 직능원, 후원기관 및 기업, 주요 언론사 등 300여 명

□ 주요 내용

- YEEP 시범사업 참여 동아리를 대상으로 ‘YEEP 자율동아리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
 - ※ ‘15년 12월말 마감 기준 141개 동아리 신청(중 31개, 고 110개)
- 온라인 예선을 통해 30개 팀을 선발하여 동아리당 50만원 활동비* 지원
 - * 활동비는 경진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 사용(부스 전시물 제작 등)
-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동아리 10개 팀 시상

□ 주요 추진일정

- YEEP 자율동아리 프로그램 신청 접수(‘15.12.31.)
- 동아리 활동 : YEEP온라인 미션 수행(~1.22)
- 창업경진대회 참가 신청(1.19~1.22)
- 온라인 예선 심사(1.23~1.28)
- 활동지원금 교부 및 경진대회 준비(2.2~2.17)
-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2.18)

□ 운영 프로그램 내용

○ 부스 운영

- 심사위원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창업아이템 소개 및 홍보
- 부스 구성 : 부스 1개(1.5m*2m), 테이블 1개, 의자 2개, X-배너 1개
- 전시 내용 : 실물아이템, 홍보자료, 아이템 소개서, 영상물 등

○ 비즈니스 미팅

- 동아리 간 MOU 협정 및 동아리 소개 미팅 진행
 - ※창업 관련 일반 동아리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
- 동아리 대표는 명함과 아이디어 소개서를 지참하여 미팅 참석
- 1팀 당 비즈니스 미팅 시간 약 10분 배정
- 비즈니스 미팅 희망 동아리 사전 신청(매칭표는 운영팀에서 작성 및 배포)
 - ※'16년 2월 12일(금)까지 3개 동아리 신청(network@krivet.re.kr)
- 미팅 기록 작성 및 평가

□ 참여 활동 세부 내용

○ 학생 참가자 활동

- 부스 운영
- 다른 동아리 부스를 방문하여 '좋아요' 스티커 붙이기
- 비즈니스 미팅 진행
- 현장 멘토링 부스 방문 및 상담

○ 심사위원 활동

- 동아리 부스 방문 및 심사

○ 일반인 참가자 활동(교육부, 직능원, 멘토, 교사 등)

- 동아리 부스 방문하여 '좋아요' 스티커 붙이기
- 동아리 부스 방문하여 우수동아리에게 투자하기(투자의향서)

□ 심사 방법 및 시상 내용

○ 심사 방법

구분	대 상	심사방법	심사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예선	창업경진대회 신청 동아리	심사위원 평가 경험치(상대평가) ¹⁾	30개 팀 선정	
본선	예선 통과 30개 동아리	심사위원 평가 일반참가자 선호도 비즈니스미팅 평가 가상투자금액	10개 팀 선정	

* 경험치 : 미션 수행 개수, 로그인 회수, 댓글 개수 등 온라인 활동 수치

- 예선 온라인 심사는 심사위원 평가(70%)와 YEOP 온라인 활동 경험치 점수(30%)을 합산하여 중·고등학교 30개 팀 선발

※ 온라인 예선 심사위원 평가항목 : 아이디어 우수성, 문제인식과 해결방법, 상업화 가능성, 협동심, 성실성

- 본선은 심사위원 평가(70%), 일반참가자의 '좋아요' 스티커 개수 (10%), 동아리 간 비즈니스미팅 평가(10%), 가상투자금액(10%)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10개팀 선발

※ 오프라인 본선 심사위원 평가항목 : 아이디어 우수성, 문제인식과 해결방법, 상업화 가능성, 소통 능력, 전시 매너, 협업능력

○ 우수동아리 시상 : 총 10건(종합우수 4건, 분야우수 6건)

시상 구분	시상명	수량	시상 내용
종합우수	교육부장관상	중등부 1 고등부 1	상장 및 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2	
분야우수	기업가정신상	2	
	협업상	2	
	미래가치상	1	
	혁신상	1	

○ 참가자 특전

-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30개 팀에게 국제지식등록(IKR)* 기회 제공

* 국제지식등록제도(International Knowledge Registry: IKR) :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의 내용 및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표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놓는 일종의 디지털지문시스템에 등록(국제지적재산권상업화협회의 아이디어 국제적인 보호, 특허 전단계에 해당)

※ 영문양식 제출한 동아리에 한해 진행

- 국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 후원기관 및 기업

- 중소기업청
- 국민대학교 LINC사업단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 국제지식재산권상업화협회(홍콩 및 한국챕터)
- LG생활건강

붙임2

『YEPP 창업경진대회』 세부일정표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참여 대상	비고	
행 사 준 비	10:30~10:50	등록	전체		
	10:50~11:20	30분	동아리별 전시부스 세팅	교사, 학생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	심사위원	
	11:20~11:50	30분	대회 오리엔테이션	전체	사회자 진행
	11:50~13:00	70분	점심 식사	전체	교내 식당 (식권 제공)
13:00~13:30	30분	장내 정리 및 전시 준비	전체		
본 행 사	13:30~16:00	150분	부스 전시 및 동아리 간 비즈니스 미팅	학생	
			부스 방문 및 심사	심사위원	
			부스 방문 및 참여활동	일반참석자 전체	‘좋아요’ 표시, 가상투자
			현장 멘토링 부스 방문 및 상담	학생	
	16:00~16:10	10분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교육부, 직능원	
	16:10~16:15	5분	인사말씀	교육부 차관	
	16:15~16:25	10분	축사	국민대 총장	
	16:25~16:50	25분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16:50~17:00	10분	폐회 (기념사진 촬영)		

* 일반 관람객은 13:30부터 개최하는 본 행사 참여 가능합니다.

* 상기(안)은 행사 당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 금년부터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추진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5,262명이 ‘17년까지 2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금년에 66% (10,085명)가, 내년에 나머지 34% (5,177명)가 전환된다. <붙임 1>
 - * (공공부문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 총 469곳
(‘16~‘17년 전환계획) 교육기관 76백 명(50.0%), 자치단체 28백 명(18.4%), 공공기관 20백 명(12.9%) 중앙행정기관 16백 명(10.7%), 지방공기업 12백 명(8.0%)
- ‘13~‘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천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 정부는 2. 17(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고, 1단계(‘13~‘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 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 이번 2단계 전환계획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단계 전환계획 수립(‘13.9월)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1단계(‘13~‘15년) 전환계획(65,896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5년 말까지 계획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천명을 전환하였다.

* <붙임 2> 1단계 전환실적 참조

-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제외자를 전환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였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붙임 3> 우수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13.9월 240천 명, '14.12월 218천 명, '15.12월 20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첫째,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선,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한다.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금년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보아가면서 타 공공부문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목표관리제 운영·관리체계 >

기재부, 행자부	각 기관	각 기관	고용부, 기재부, 행자부
기간제 사용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마련	주무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	기간제 사용 목표관리제 준수노력	실태조사, 기관평가 등을 통해 이행점검
'16.2~3월	'16.3~4월	'16.4~12월	'16.12월

- 한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령자·초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기관 등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

**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금지 등

○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규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반영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4월 지침 상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그간 시범 운영해 온 노사발전재단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센터도 상담역량을 높이고 지방노동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규직 고용 또는 전환에 대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비정규직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차별시정 자율진단,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 (공공기관) 직무가치 반영,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난이도 등 반영

<3> 셋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다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예) 생명·안전 분야, 급식 등 소속 외 근로자 활용사례 조사 ('16년)

- 또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한다.

-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위: 개소, 명)

구분	대상기관	비정규직	전환제외	전환대상	전환시기		
					'15년 下 (기 전환)	'16년	'17년
합계	827	203,864	185,447	18,417	3,155	10,085	5,177
중앙부처	48	14,612	12,320	2,292	657	950	685
자치단체	245	49,027	45,388	3,639	831	1,625	1,183
공공기관	315	42,167	38,772	3,395	1,430	1,532	433
지방공기업	142	8,038	6,655	1,383	159	819	405
교육기관	77	90,020	82,312	7,708	78	5,159	2,471

- * 전환제외: 일시간혈업무 종사자 및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자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한 311개 ('16년 신규지정 기관 제외)와 기타 금감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 4개 기관을 포함

(단위: 개소, 명)

구분	전환계획(누계)				전환실적(누계)			
	합계	'13년	'14년	'15년	합계	'13년	'14년	'15년
합계	65,896	30,904	20,003	14,989	74,023 (112%)	31,753	25,461	16,809
중앙부처	7,174	2,499	3,388	1,287	7,501 (105%)	3,677	2,282	1,542
자치단체	8,035	2,683	2,584	2,768	7,522 (94%)	2,727	2,956	1,839
공공기관	13,298	5,485	5,037	2,776	15,845 (119%)	5,726	5,203	4,916
지방공기업	2,860	929	950	981	3,128 (109%)	1,166	872	1,090
교육기관	34,529	19,308	8,044	7,177	40,027 (116%)	18,457	14,148	7,422

【1】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김홍일)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4가)
(담당 :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 대리 정동기 02-2639-0527)
- 근로자수 : 664명(정규직 638명, 비정규직 26명)
- 1단계('13~'15년) 전환계획 258명, 전환실적 322명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환경관리직, 방호직 등)를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고 있음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복지포인트, 각종수당, 자녀학자보조비, 인센티브, 교육운영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동일한 보수기준표 적용(정규직+비정규직), 직종간 승진제도 도입 운영

【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호경)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담당 : 총무인사팀 장강민 053-603-1123)
- 근로자수 : 662명(정규직 260명, 비정규직 402명)
- 1단계('13~'15년) 전환계획 26명, 전환실적 192명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13년부터 '15년까지 19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특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와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 중임

【3】 군포시(시장 김윤주)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담당 :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차동주, 주무관 박미정 031-390-0122)

○ 근로자수 : 1,240명(정규직 1,120명, 비정규직 120명)

○ 1단계('13~'15년) 전환계획 53명, 전환실적 89명

군포시는 도서관 운영보조 인력 등 전환대상자 추가 발굴을 통해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초과달성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

앞으로도,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채용원칙을 준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4】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오치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담당 : 인재운영팀장 오종성, 인재운영팀 문소진 02-410-1523)

○ 근로자수 : 444명(정규직 359명, 비정규직 85명)

○ 1단계('13~'15년) 전환계획 75명, 전환실적 111명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무보조, 회원접수 직종 등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1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특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스포츠강사와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 중임

공공연구성과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모집

- 미래부, 수요발굴지원단 선정계획 공고,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 미래부는 전문위원이 상주하며 중소·중견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 1379)와 수요발굴지원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공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요발굴지원단에는 공공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 뿐만 아니라 산업별 협단체, 대학 산학협력단, 사업화전문회사, 테크노파크, 벤처캐피털 등 산학연 주체들이 참여 가능하다.
 - 수요발굴지원단 참여 형태는 주관기관 단독형, 주관기관 협력형, 컨소시엄형 등 총 3가지로 구성하여 참여가능하다.(표 참조)

【 수요발굴지원단 구성 형태 】

구분	① 주관기관 단독형	② 주관기관 협력형	③ 컨소시엄형
주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형태	주관기관 + 내부참여자	주관기관 + 외부참여자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선정된 수요발굴지원단(약 30개 내외)은 후보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사업화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친 수요발굴지원단은 발굴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한편 미래부는 산업부, KIAT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기술 사업화 사업과 R&BD, 투·융자 지원사업에 연계할 예정**이다.
- 수요발굴지원단이 발굴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사업은 물론, 25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KIAT*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 (후속 R&D 지원)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 R&D재발견 등
- * (투·융자 지원)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술사업화펀드, R&D사업화 전담은행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또는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위해 이번 달 25일과 26일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업설명회 】

권역	일시	장소
서울	2월 25일(목) 14시	벨레상스호텔 유니버셜 룸(4F) (서울시 강남구 테레란로 237)
대전	2월 26일(금) 14시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1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41)

평창동계올림픽 D-2년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

- ‘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5세대 이동통신(5G), 초고화질 방송(UHD)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방송·통신 업계와 정부가 함께 모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방송통신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상파방송3사(SBS, KBS, MBC), 통신3사(KT, SKT, LGU+)와 함께 2.18(목), 14:00 서울 엘타워에서 방송·통신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D-2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5G, UHD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동향과 평창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 향후 글로벌 기술과 시장을 선점·주도할 수 있는 방송·통신 각계 추진방향과 상호협력방안 등 “방송과 통신이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심도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동 세미나는 “미디어 산업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부에 걸쳐 방송통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SBS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스포츠미디어 영상 발전,” KBS의 “UHD 방송과 서비스 플랜”, KT의 “KT가 선보일 세계 최초 5G올림픽 준비현황”에 대한 발표 후, 이희상 성균관대 교수가 “성공적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방송통신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하였고,

- 2부에서는 방송통신 업계 및 정부 전문가들의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 ICT올림픽”에 대해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초일류 방송콘텐츠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 “우리가 우수한 보유역량을 결집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간 협력을 통해 올림픽이라는 기회의 장(場)을 잘 활용한다면, 장차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동 세미나에 앞선 식전행사로, 미래부 주최로 공모한 「평창ICT동계 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 동 공모전은 평창 ICT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지원한 150팀의 작품에 대해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0팀 등 최종 13개 팀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상은 드론,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남녀노소,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쏠 세계인이 성화봉송에 동참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 우수상에는 평창올림픽 로고와 같은 동작을 하는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홍보하는 아이디어와, 경기기간 중 지역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아이디어가 각각 선정되었다.
- 향후 미래부는 당선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평창ICT동계올림픽 구현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개최 배경**

-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세계적으로 UHD, 5G 등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는 시점
- 올림픽 D-2년을 맞이, 향후 방송·통신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방송·통신·정부 합동의 특별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 일시/장소 : '16. 2. 18(목), 14:00~17:30 / 엘타워 그레이스홀(6F) (양재)
- 주 최 : 미래부, 방통위, 평창조직위, SBS, KT, KBS, MBC, SKT, LGU+
- 주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후 원 : 강원도청,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진흥협회(RAPA), 스마트미디어협회(SMPA), YG엔터테인먼트, CGV, 인터엠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0	▪ (식전행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기념촬영	최우수(1), 우수(2), 장려(10)
13:50~14:00	▪ (식전행사) UWV 소개 및 영상 관람	VIP 및 참석자
14:00~14:05	▪ 평창ICT동계올림픽 홍보동영상 상영	
14:05~14:25	▪ 인사말씀	미래부장관 등
14:30~14:55	▪ Keynote speech - 협업·실험·창의 콘텐츠로 도전하는 미디어 특수 : 미디어 산업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15:05~15:25	▪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미디어 영상의 발전	SBS 김상일 부장
15:25~15:45	▪ UHD 방송과 서비스 플랜	KBS 정강진 팀장
15:45~16:05	▪ KT가 선보일 세계최초 5G 올림픽 준비현황	KT 김형준 상무
16:05~16:25	▪ 성공적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방송통신 협력방안	이희상 성공관대 기술전문대학원장
16:35~17:30 (55')	▪ 패널토의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방송·통신·정부 관계 전문가

□ **공모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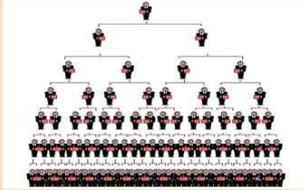
- 공 모 명 : 평창 ICT 동계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5. 11. 9. ~ 12. 31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접수)
- 공모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ICT 서비스, 홍보, 수출연계 3개 분야
- 접수결과 : 심사대상 150팀(ICT 서비스(126), 홍보(14), 수출연계(10))

□ **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사업별 담당자로 구성된 1차(48개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시상팀(13개팀)** 선정
- ※ (심사기준) 1차: 적합여부 평가(주제이해도, 내용충실성), 2차: 5개 항목 평가(적합성, 창의성, 연계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구 분	제 목	분 야
최우수상(300만원) (미래부장관상)	모두의 성화봉송 with 하늘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 속의 성화 봉송	서비스
우수상(150만원/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스마트 O2O 전자식권 및 푸드타운 브랜딩	홍보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홍보 아이디어	서비스
장려상(50만원/팀) (스마트미디어산업협회상)	우리는 눈꽃 메신저 - 평창 ICT 응원단 -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글로벌 소통 채널 서비스	서비스
	방송 채널 실시간 연동형 방송 서비스	서비스
	관람객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ICT를 기반으로 사물 IT와 연결하여 감성 ICT의 새로운 콘텐츠 구현	서비스
	StreamGO : 딥러닝을 이용한 Live View Streaming 길 안내 서비스	서비스
	SNS 공유 AR 키넥트 포토존 ‘찍어서 자랑하는 찍.자’	서비스
	Olympic Q(증강현실을 이용한 동계올림픽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	서비스
	스캐빈저 헌트 - 5G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소셜 디스커버리 개발	수출 연계
	나도 할 수 있다(관람객과 하나 되는 동계올림픽)	서비스
	HHET 안내판과 Oning 팔찌	서비스

□ 최우수상

제목	모두의 성화봉송 with 하늘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의 성화봉송		
분야 (서비스/홍보/수출연계)	서비스	참가자(팀)	(팀명) Team CID (김세진, 이승미, 박재형)
내용	<p> ○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가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성화봉송에 동참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을 나는 성화봉송) 드론에 성화봉송 홀로그램 기기를 부착, 거동이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드론을 조종하며 성화봉송에 참여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마음 속의 성화봉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스마트폰 바탕화면 또는 정지화면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를 띄우고 실제 핸드폰 부딪히기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 스마트폰에도 성화가 옮겨 붙을 수 있음, 불을 나눠준 사람들을 선정하는 랭킹전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가능(ex: 아이스버킷챌린지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 유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1. 스마트폰 속에 성화를 보유하고 있음.(초기 성화 보유자 선정을 통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2. 두 스마트폰을 인접시켜, 성화를 전파시킨다(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매우 인접한 상태에서 전파 가능하도록 설정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3. 앞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화를 전파하고 홍보하며 애정을 갖는다!</p> </div> </div>		

문체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 최대 3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이음센터 스튜디오에서 '2016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설명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 이하 문화원연합회)와 함께 개최한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는 임대 아파트와 서민·단독 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수행단체로 선정된 지역의 문화단체 또는 조직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논의하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사례: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졸업단체('09년~'11년, 3년간 지원)
- ▶ 대구 남구 대명2동 지역주민이 악단을 결성, 음악을 함께 연주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소통하는 창구를 형성

문체부는 올해 사업의 수행 단체로 10개 내외의 신규 단체나 조직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나 조직 등은 최대 3년 동안, 1개 사업당 연 2천만 원에서 3천5백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5일(목)부터 3월 4일(목) 낮 12시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문화원연합회 누리집(www.kc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연구홍보팀(☎ 02-704-0018)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09년에 시작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복권기금 창작나눔사업 중에서 참여자 만족도(85.5점/4개 사업 중 1위)가

가장 높은 대표 사업이다. 올해에도 체계적인 현장 컨설팅과 함께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으로 이번 사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체육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기념관 인근 신축, 이용 편의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강국에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체육 유물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전시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관 인근에 '체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을 건립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 투입해 2019년 개관 예정,
핵심 스포츠 문화공간 거점으로 조성

박물관은 앞으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어, 대지 8,095㎡, 연면적 5,14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전시 시설(상설전시관, 체험전시관, 특별전시관)과 교육 시설, 수장고, 편의 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박물관은 다양한 체육 관련 주제로 활발한 전시와 체험, 연구·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이 앞으로 올림픽기념관과 연계, 운영되면 더욱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체육'과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이용자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는 양방향 소통형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상설 전시장은 스포츠역사관과 스포츠유물전시관, 스포츠체험관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주기적으로 시대 상황과 이용자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특별 전시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건축, 박물관, 체육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박물관 건립추진자문위원회(위원장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에 구성하고, 지난 2월 19일(금)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자문했다.

또한, 박물관 건립 전에 전시와 연구 등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대국민 기증 캠페인’도 바로 진행한다. 자료 수집(기증) 대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체육 관련 성과물(우승컵, 메달 등)과 기록물(문서, 출판, 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유품, 기념품, 사용품 등 역사자료들이다. 체육박물관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 소장가뿐만 아니라 전문 수집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증자들이 캠페인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증 누리집(www.kspo.or.kr/sportsmuseum)’과 유선 안내(☎02-410-1395)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박물관이 지하철 8, 9호선 역 인근에 있어 관람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또한 올림픽파크텔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과 청소년들, 올림픽공원 내 각종 공연의 관람객들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올림픽공원 일대가 스포츠·문화공간으로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체육박물관 해외 사례

□ **프랑스 국립스포츠박물관**

구분	내용
위치	프랑스 파리 13구
개요	1963년 프랑스정부 산하 스포츠성 건립, 프랑스 문화성 인증, 2008년 재개관, 2013년 전시장 폐쇄, 2014년 니스에 새로 완공 예정
특징	-2012년까지 소장품 일부는 파리 13구의 상설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나머지는 프랑스 경기장에 보관하였으나 2013년 현재 전시장 폐쇄 -현재 박물관은 재개관을 위한 전체 소장품 정리 중 -소장품 보존처리와 복원 및 이동, 데이터 구축 정비
전시구성	-온라인 전시 제공 -박물관 이전으로 외부 결연을 맺은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를 하여 소장품을 전시
활동내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보존처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포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격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원</p> </div> </div>
소장품 특 징	-쥘 세레(Jules Cheret), 카상드르(Cassandre), 툴루즈 로트렉(Toulouse-Lautrec) 등 거장들의 작품 및 조각, 그림 등 올림픽과 관련된 예술품 보유 -스포츠 관련 물품, 사진, 우표, 포스터, 서적, 광고 등 60만 점 이상 소장

□ 호주 국립스포츠박물관

구분	내용
위치	호주 멜버른 크리켓경기장
개요	-1984년 멜버른 크리켓 클럽(MCC)에 의해 설립
특징	-호주가 종주국인 크리켓을 중심으로 크리켓박물관이 먼저 운영되었고 호주축구, 스포츠 및 올림픽갤러리 등이 통합 -1853년 세워진 호주 국가 유산인 멜버른 크리켓 경기장(MCG)에 위치 -별도 크리켓박물관, 올림픽게임, 호주축구, 크리켓경기장 등이 통합
전시구성	-호주 대표 스포츠 크리켓, 축구를 중심으로 구성 -크리켓과 축구명예의 전당, 스포츠영웅 James Hird, Shane Warne의 3D 홀로그램존, 올림픽에서 호주의 성과 및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역사 -호주 역사에서 MCG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 특별히 모든 스포츠에 걸쳐 호주 선수의 뛰어난 스포츠 업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명예의 스포츠 호주 홀(SAHOF)을 구성
전시 및 투어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MCC 뮤지엄</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크리켓 홀</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호주 축구 명예의 전당</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The People's Ground</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Game on</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Backyard to Baggy Green</p> </div> </div>
기획전 및 특별전	<p>현재 스포츠사에서 중요한 기념일이나 기념할 사건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전으로 개최하고 이동전시를 하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픽 포스터로 살펴보는 올림픽 정신, 'A call to The Games' -호주의 역사속에서 국가유산인 멜버른 크리켓경기장의 역할 , 'Hidden History of the MCG' -원주민 공동체의 삶에 호주 축구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탐구, 'Yiloga Tiwi Footy Exhibition'

□ 일본 국립스포츠박물관

구분	내용
위치	일본 도쿄시 신주쿠 국립경기장 내
개요	1959년 왕족 치치 부노 야스히토의 선수업적을 기리고 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ince chichibu Memorial Museum으로 왕족인 치치 부노 야스히토가 다양한 올림픽 선수로 활동한 공적을 기념 -올림픽과 일본 스포츠 역사 이해 -국내외 모든 스포츠 관련 서적 보유한 체육도서관 운영(일본 왕실 궁내청 산하)
전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게 일본 스포츠역사, 일본 올림픽역사, 치치 부노 야스히토 유품실, 스포츠예술실 등으로 구성 -스포츠예술은 관외에도 전시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자세하게 관람 가능 -고대올림픽, 올림픽의 발자취, 영광의 증표, 일본에서 개최된 올림픽, 초기의 현대 스포츠, 스포츠 재건의 역사, 국립경기장의 역사, 치치 부노 야스히토 유품실, 스포츠 예술·전통 스포츠, 뉴 스포츠 등으로 구성
전시 및 투어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전시실 입구</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올림픽관</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초기 현대 스포츠관</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치치 부노 야스히토 유품관</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전통 스포츠관</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스포츠 도서관</p> </div> </div>
기획전 및 특별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기장 건설 전 마지막으로 국립경기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전 "SAYONARA 국립경기장" - 국립경기장의 1958년 완공 당시와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따른 증축 시 건축 도면과 모형, 영상 자료 등을 전시하는 기획전 "국립경기장의 발자취"

농식품부,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 발굴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식재단은 식재료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음식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를 발굴

- 음식관광의 소재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음식관광 코스를 발굴하여, 음식관광의 저변확대에 기여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 코스

메밀(평창), 콩(파주), 인삼/홍삼(금산/진안/부여), 한우(마장동), 흑돈(제주), 약초/산채(전주/지리산), 쌀(여주/이천), 소금(태안/신안), 김(홍성, 광천), 굴(통영/거제)

◇ 이번에 발표된 음식관광코스는 지자체 및 민간여행사 등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음식관광상품(K-food 로드 등)을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월 ‘이달의 음식관광테마’ 발표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나아가, 음식관광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홍보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음식관광의 소재로서 경쟁력이 있는 식재료를 테마로 하는 음식관광 코스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 이번 발표는 쇼핑위주의 저가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음식관광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획하였다.

- 외식트렌드, 외국인관광객의 니즈(Needs)등을 고려하여, 음식관광의 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선별하고, 소재별로 제안된 여행상품안을 대상으로 여행사 등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되었다.
- 이번에 음식관광테마로 선정된 식재료는 메밀, 콩, 인삼/홍삼, 한우, 흑돈, 약초/산채, 쌀, 소금, 김, 굴 이다.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 코스
메밀(평창), 콩(파주), 인삼/홍삼(금산/진안/부여), 한우(미장동), 흑돈(제주), 약초/산채(전주/지리산), 쌀(여주/이천), 소금(태안/신안), 김(홍성, 광천), 굴(통영/거제)

-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된 식재료 음식관광 테마 및 음식관광 여행상품코스가 지역별 'K-food 로드'개발 및 음식관광 신상품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 각 식재료의 출하시기 및 제철 음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달의 음식관광테마'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쉐프와 연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 음식관광 테마를 바탕으로 한 음식관광의 가치제고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식품 및 한식문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식세계화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며,
 - 향후, 외국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식재료 투어상품과 같이,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음식관광의 확대를 통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음식관광 상품 발굴 현황

※ 식재료 테마 음식관광코스 분류표

상품명	음식자원	주요지역	주요타겟		여행형태		적정 시기
			외국인	내국인	개별	단체	
글루텐프리, 올림픽 평창 메밀투어	메밀	평창	●			●	9월
장단콩! 그리고 평화누리 파주!	콩	파주	●			●	11월
고려인삼 본류를 찾아떠나는 금산/진안/부여 여행!	인삼/홍삼	금산/진안/ 부여	●			●	4월
서울 한우의 본고장, 서울 마장동 우시장 투어	한우	마장동	●		●		4월
흑돈 가장 맛있는 제주 별미여행!	흑돈	제주	●			●	7월
한국대표 음식테라피, 산채음식/비빔밥 투어	약초/나물/ 산채	전주/지리산	●			●	9월
임금님 밥상 이천쌀 투어	쌀	여주/이천	●	●		●	10월
음식의 원천, 신안/태안 염전투어	소금	태안, 신안	●			●	8월
바다의 산소 광천김 투어	김	홍성 광천	●			●	12월
한류촬영지와 함께하는 통영 굴투어	굴	통영/거제	●			●	1월

농관원,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 인증희망 4,500농가 맞춤형 컨설팅, 인증품 안전성검사비 28.5억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확산 효과가 큰 공동선별회 등 대규모 조직 중심 컨설팅

- '16년 맞춤형 컨설팅: 150개 조직 4,500농가 이상

* 연도별 실적 : ('10) 2조직/136농가 → ('13) 73/1,798 → ('14) 112/3,444 → '15) 145/3,768

○ 재배환경조사부터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인증신청서 작성까지 인증신청 준비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도

◇ GAP 인증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토양·수질·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 지원

○ 소요예산 : 28.5억원(국고 20억, 지방비 8.5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컨설팅은 '10년 시범사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GAP의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공동선별회, 원예전문 생산단지 등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GAP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컨설팅의 주요 수행사항은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요령, 인증기준 및 실천요령 교육, 인증신청까지 농업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 '16년 사업예산: 5억원(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컨설팅 수행)

-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지자체·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 (118개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 또한, 농관원은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농가당 안전성 검사 항목별로 1회 지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인증농가가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다만, 다른 사업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와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 깻잎, 콩나물 등)은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을 당초 시·군·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였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농산물 인증서,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30.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조기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GAP 인증 참여를 적극 당부하였다.

참고 1

GAP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사업

□ 목 적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확산을 위해 인증 희망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통해 GAP선도 조직으로 육성하여 보편적 확산을 도모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 홍보 등)

□ 수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 100%)

□ 추진현황 및 예산

년 도	예산 (백만원)	시행 지구	인증 지구	인증 농가	인증 면적(ha)	비고
'10년	100	24	2	136	335	시범사업
'11년	100	18	9	619	351	본사업
'12년	200	30	21	826	601	"
'13년	300	120	73	1,977	1,798	"
'14년	500	175	112	3,444	4,295	"
'15년	500	203	145	3,768	3,475	
계		570	362	10,770	10,855	

□ 주요 사업내용

- 농업인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인증기준 적합성 현장조사,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요령, 인증기준 교육 및 신청 등
- 컨설팅 업무 역량 강화
 - 품목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예시, 컨설팅 업무메뉴얼 제작 등

참고 2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 목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 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추진경과

- '07.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도입
- '12. GAP제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매칭펀드 조성 추진
- '14. GAP인증농업인에게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정
- '16. 분석항목별 1회 제한 규정 폐지, 신청기관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 연도별 지원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 계	380	571	888	1,255	1,406	1,575	2,715	2,722	2,857	2,857
국 비	380	571	888	1,255	1,406	1,575	1,900	1,900	2,000	2,000
지방비	-	-	-	-	-	-	815	822	857	857

□ 주요 변경사항

-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농산물 중금속 항목별 1회 제한 규정 폐지
- 단, 1회 이상 수확하는 품목이 잔류농약 및 중금속은 1회로 제한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기관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 제출서류: 안전성검사비 지원 신청서, GAP인증서, 검사성적서 및 영수증

참고 3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현황

연도별 인증 실적

(단위: 개, 건, 호, 톤)

연도	대상품목	인증품목	인증기관	관리시설	인증건수	농가수	면적	생산계획량
2007		50	31	316	364	16,796	24,754	331,421
2008		59	38	417	1,053	25,158	37,129	419,842
2009	전품목	59	43	484	1,233	28,562	40,081	434,047
2010	전품목	86	45	565	1,459	34,421	46,701	509,931
2011	전품목	89	49	606	1,756	37,146	49,548	642,165
2012	전품목	110	51	718	1,969	40,215	55,215	691,228
2013	전품목	129	48	756	2,499	46,000	58,703	749,274
2014	전품목	136	44	681	2,689	46,323	58,762	795,886
2015	전품목	153	44	707	4,019	53,583	65,410	1,068,167

* 대상품목 확대('09.12.19.):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시·도별 인증 현황

(단위: 호, ha)

시도	농업현황		14년도		'15년도		증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1,120,775	1,691,106	46,323	58,762	53,583	65,410	7,260	6,648
서울특별시	2,751	480	1	-	2	1	1	1
부산광역시	7,070	6,351	67	79	84	101	17	22
대구광역시	17,290	8,660	-	-	22	15	22	15
인천광역시	12,928	20,098	78	44	115	108	37	64
광주광역시	11,869	10,370	164	126	616	334	452	208
대전광역시	9,357	4,385	67	29	78	33	11	4
울산광역시	11,559	11,369	144	171	7	17	△137	△154
세종특별자치시	6,072	8,444	117	97	82	68	△35	△29
경기도	129,906	176,025	7,782	10,312	9,032	11,594	1,250	1,282
강원도	69,887	108,726	4,133	10,422	4,403	10,600	270	178
충청북도	76,435	112,096	3,307	3,098	4,201	3,818	894	720
충청남도	135,335	219,215	5,612	6,840	5,967	6,341	355	△499
전라북도	104,037	204,613	7,699	11,635	7,480	11,009	△219	△676
전라남도	160,141	305,888	5,402	4,921	5,804	5,952	402	1,031
경상북도	192,583	277,649	9,548	8,931	11,689	11,291	2,141	2,360
경상남도	135,111	154,051	1,666	1,476	3,032	2,883	1,366	1,407
제주도	38,444	62,686	536	531	969	1,245	433	714

환경부, 축축한 물순환 선도도시 3곳 선정한다

◇ 환경부, 인구 10만 이상 전국 지자체 대상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

◇ 전문가 심사 통해 3곳을 물순환을 선도하는 축축한 도시로 선정

◇ 선도도시는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저영향개발기법 적용과 조례 제정 등 물순환 체계 개선 추진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축축한 도시)’ 3곳을 선정한다.
 -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처럼 빗물의 흡수를 막는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 선정대상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시·군·구) 및 광역·특별·특별자치시
 -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희망하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서와 물순환 회복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곳의 도시가 선정된다.
- 환경부는 선정된 3곳의 도시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 빗물유출저감시설 : 주택단지(단지내 빗물정원, 옥상녹화 등) 도로(가로수와 침투기능을 겸한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측구 등) 상업지역(투수보도블럭, 식물재배화분)

○ 환경부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소요비용의 일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물순환 선도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시 오창읍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의 저영향개발교육센터에서 3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 빗물유출제로화 시범단지 : 도시에 저영향개발 시설을 시범설치하여 기술요소를 평가하고 시설의 설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성했으며 현재 오창('14, 상업지역)과 전주('15, 주거지역) 2곳이 있음

□ 물순환 선도도시는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원 등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시 곳곳에 적용되어 기존 도시에 비해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나다.

○ 따라서,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어(비점오염) 수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도시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환경부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난 2015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행복도시)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사업장에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영향개발기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붙임 1.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 계획.
2. 물순환 선도도시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붙임 1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계획

□ 배경 및 목적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가뭄·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수생태계 악화 등 물문제 가중
- 저영향개발 적용을 통한 자연적 물순환 회복으로 도시 물순환 건전성을 높인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조성 추진

□ 공모 계획

- (공모 대상)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시·군·구) 및 광역·특별·특별자치시
- (공모 기간) 2016. 2. 17~ 4. 15
- (공모 방법) 지자체에서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모 기간 내에 환경부로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작성자료) 도시별 물순환 현황, 물순환 회복 추진 계획 등

<지자체 주요 작성 사항>

구분	항목	세부 내용
물순환 상태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토지이용 현황도, 불투수면적률 현황, 도시인구 밀집도 등
	기후조건과 자연환경	강수량, 증발량, 토질·토양, 지하수, 고도
	수질 및 수생태계	하천수질, 생태계(생태자연도 등), 비점오염원 현황
	물순환변화의 영향	도시 홍수(침수피해 이력), 도시 미기후(열대야, 폭염) 등
물순환 개선 추진기반	사업추진계획 수립 여부	저영향개발 적용사업 추진계획(타당성, 기본계획 등)
	제도 개선	물순환 개선 조례 마련계획
	부서간 협업계획	물순환 관련 유관부서 업무분담 및 협업계획서 등
	교육·홍보 계획	학교교육 연계 교육계획, 지역주민 교육·홍보계획 등

붙임 2 물순환 선도도시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개요) '16년도부터 추진되는 물순환 선도도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지원 방법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시간 및 장소) 2016.3.3. 14:00~, 충북 청주시 오창읍 환경부 저영향 개발 교육센터(첨부 참조)
- (대상)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시·군·구) 및 광역·특별·특별자치시 중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 담당자
- (주최/주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한국환경공단 수생태정책지원팀
- 주요내용
 -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계획 설명(환경부)
 - 저영향개발이란?(한국환경공단)
 -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설명(한국환경공단)

□ 세부일정

구 분	소요	주요 일정	비고
13:00~14:00	60'	○ 등록 및 장내 정리	
14:00~14:05	5'	○ 인사말씀	수생태보전과장
14:05~14:25	20'	○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계획 설명	환경부 (담당사무관)
14:25~14:45	20'	○ 저영향개발 소개	한국환경공단
14:45~15:15	20'	○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한국환경공단
15:15~15:30	15'	○ 질의응답	
15:30~16:00	30'	○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 현장견학	희망자

< 첨부 : 환경부 저영향개발 교육센터 오시는길 >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14(대운프라자)304호
- 교통 : 주차 가능, 대중교통(KTX 오송역 750번·751-1번, 오창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3분)

● 오시는 길

mev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Tel 044-201-7050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본부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정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Tel 032-590-4488

빛물관리 환경부 저영향개발(LID) 교육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14 (대운프라자) 304호
 Tel 043-211-3380
<http://nonpoint.me.go.kr>

1. 도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도시화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면이 증가하면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이 훼손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유출되어 도시홍수와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일어납니다.
 -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평시 지하수 저장량이 부족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가 일어납니다.
 - 도시 열섬, 열대야 등의 기후현상도 물순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분산식 빗물관리 방법인 저영향개발을 적용하면 저류, 침투, 증발산 등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지하수가 충전되어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 시 하천의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생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서식처 확보, 도시경관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저영향개발 기법의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도시의 물순환 흐름을 고려하여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의 투수성 시설을 배치하여 침투 및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3.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면 어떠한 일을 하나요?

- 선도도시는 적정한 지역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별 물순환 상태를 평가하여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 한편, 도시의 물순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합니다.
 - 우리집 지붕에 옥상녹화를 하거나 화단을 설치하여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고,
 - 비오기 전에 우리집, 가게 앞을 청소하여 빗물과 함께 오염물이 하천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 또는 눈이 녹은 물에 의해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불투수면을 줄이는 등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빗물을 관리하는 방식
- 불투수층(不透水層)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

평생 현역을 응원합니다!

인생이모작을 위한 생애설계서비스 지원

정리해고 후 40년간 익힌 봉제 기술을 바탕으로 봉제 기술 전문강사로
인생이모작 성공한 사례

- 재취업 계획도 없이 패턴사로 40년간 일해 온 회사로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막막했습니다.
-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생애설계서비스를 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관련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을 잘 한다면 평생 현역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얼마 전, 기술학교 강사로 재취업에 성공해서 40년간 익힌 봉제기술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작게나마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꿈을 꾸며 매일 강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씨, 61세, 봉제기술사>

- 장년에 진입하는 재직근로자의 생애경력 관리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 생애설계서비스'가 기업 및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15년 참여자 134개사 9,736명,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4.5점(5점 만점)

- 생애설계서비스는 장년 근로자들이 그 동안의 직장생활과 경력을 스스로 돌아보고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서 개인별 평생 경력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45세 이상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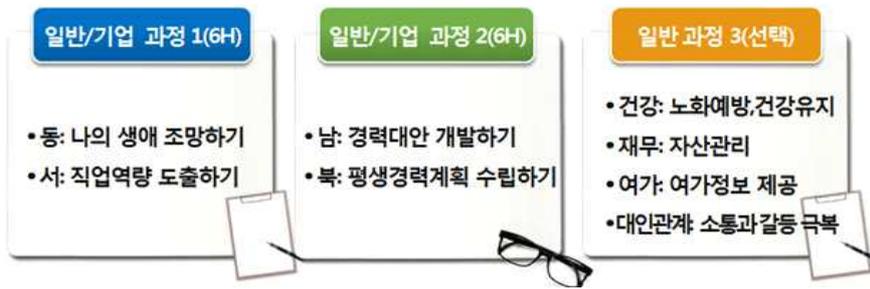
* 참여대상자 확대 : 50세(15년) → 45세(16년)

- 프로그램은 집체(2일 12시간) 교육 뿐 만 아니라 이러닝(www.lifeplan.or.kr)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재직 시부터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선진국 기업과 삼성, 포스코 등 국내의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생애설계서비스를 통해 장년들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조망해 봄으로써 순조로운 생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생애설계서비스 개요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

-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오랫동안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현역지원 프로젝트
- 대상: 만4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 중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50세 근로자
- 비용: 무료
- 프로그램 구성 : 기초(6H)와 심화(6H)과정으로 총 2일(12H) 구성
 - (1일차) 직업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강점역량을 파악
 - (2일차) 미래직업을 위한 경력설계 및 자기개발 계획 수립
 - (선택)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 경력설계 이외의 생애설계 선택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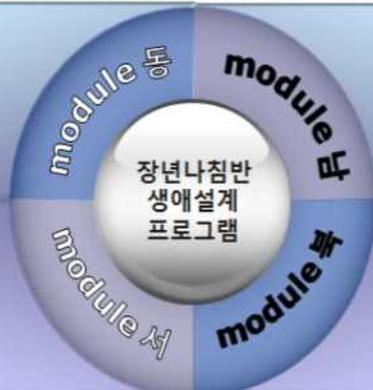
◆ 기업과정 대상

- 만 45세 이상 재직 근로자 의 참여 가능한 기업
 - * 20명 이상인 경우 출강 가능 / 20명 이하인 경우 센터에서 참여
- 노동조합, 기업 관련 협회, 중소기업단체 등 교육프로그램이 반영 가능한 기관
 - * 기업이나 기관의 수요 및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

[기업과정1] 기초과정 6H

나의 생애 조망하기
 생애주기 상 중장년의 의미
 일과 성공에 대한 재정의
 삶의 가치 변화 확인

직업역량 도출하기
 외부 직업세계의 변화 학습
 직업역량 도출을 통해
 자신의 개선 및 필요한 점 모색



[기업과정2] 심화과정 6H

경력대안 개발하기
 경력대안의 구체적 사례 제시
 대안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네트워킹의 이해 및 확장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경력설계 사례 연구
 경력계획 수립의 필요성 환기
 장년나침반 마인드맵 그리기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역량 강화

- 2016년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대상자 모집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기관 내 성희롱 예방조치와 성희롱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상담하고 성희롱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내부 직원으로, 2008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지정이 의무화됐다.
 -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해 왔으나,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실시율이 38.3%수준에 불과해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고충상담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2명 이상 지정 운영
 - **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지정비율 92.5%, 교육실시: 38.3%('15년 실적점검결과)
- 올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모집기간 별로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총 59회(전문교육 55회+심화교육 4회)를 진행해 한 해 동안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 ('15) 이수인원 2,888명(전문/심화과정) → ('16) 목표인원 3,080명

** 심화과정 : 고충상담원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과정 이수자 대상

-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제작된 매뉴얼(manual·안내서)에 기반해 사건처리 및 상담의 실전기술을 강화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뒀 사례공유, 토론 및 발표, 역할훈련 등이 포함된 자기주도적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 ('15년) 사건처리매뉴얼 제작 : 관리자용, 대학용, 중고등학교용 (총 3종)

- 또한 고충상담원 교육확대를 위해,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상시 운영되는 교육 이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등 각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이 실시되고 민간사업장까지도 고충상담원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의무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consulting·자문)도 올해 600여 곳 이상으로 확대실시하며, 고충상담원의 지정 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점검과 고충상담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향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15년) 404곳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16년) 600여곳 이상(목표)

-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1차 모집은 2월 22일(월)부터 3월 15일(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평소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 각 기관별 맞춤형 교육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최근 3년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이수 현황
2. 2016년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 계획

□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과정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문과정	1,058명	1,835	2,704명
심화과정	94명	74	184명
합 계	1,152명	1,909명	2,888명
[참고] 별도모집(맞춤형) 과정 *상기 실적포함인원	326명 국방부: 83명 법무부: 76명 도로교통공단: 92명 농협: 49명 한국전력공사: 26명	310명 국방부: 175명 경찰청(서울): 35명 농협: 29명 법무부: 71명	894명 국방부: 247명 경찰청(전국): 549명 농협: 37명 법무부: 61명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및 민간사업장 교육 제외

□ 민간사업장 교육

구 분	이수자 수
2013년	26명
2014년	42명(1차 13명, 2차 29명)
2015년	44명(1차 29명, 2차 15명)

□ 교육 만족도(5점 척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 점	4.43	4.52	4.50
교육내용	4.33	4.47	4.40
교육운영	4.50	4.57	4.53
강의만족	4.45	4.52	4.50

□ 개 요

- (교육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고양캠퍼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화정동 964) 고양지방합동청사 3층)
 - 남부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예인길 47(초산리 465번지) 한송예술인촌 종합아트홀 내)

○ 교육과정 및 신청기간

구 분	교육장소	횟 수	교육대상	교육신청기간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일 집합교육 /14시간 (비숙박)	고양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화정)	53회	국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유초중등 교원 제외	[(1차)4월~6월 교육] 2월 22일~3월 15일 18:00
				[(2차)7월~9월 교육] 6월 1일~6월 16일 18:00
				[(3차)10월~11월 교육] 9월 1일~9월 20일 18:00
	남부센터 (경상남도 양산)	2회	남부지역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 학교 및 대학 제외	[(1차)3.31~4.01 교육] 2월 22일~3월 8일 18:00
				[(2차)9.5~9.6 교육] 6월 1일~6월 16일 18:00
성희롱고충상담원 심화과정 *사이버 선수학습 병행 1일 집합교육 /총 15시간 (사이버8시간+ 집합교육7시간)	고양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화정)	4회	국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자 및 고충상담경력 2년 이상자	[(1차)4월~6월 교육] 2월 22일~3월 15일 18:00
				[(2차)7월~9월 교육] 6월 1일~6월 16일 18:00
				[(3차)10월~11월 교육] 9월 1일~9월 20일 18:00

○ 교육신청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
개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신청
-> 홈페이지 화면 중앙 '교육신청' 클릭 후 월별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 교육문의

- (고양캠퍼스)031-936-5908~9/ (남부센터)055-372-2733

□ **상반기 교육일정**

○ **[(전문)고양캠퍼스]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상반기 교육일정**

※ 2일 14시간 집합교육(비숙박)

연번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	교육대상
1	[1차 모집] 2.22(월)~3.15 (화)18:00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	04.04~04.05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2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	04.07~04.08	
3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	04.11~04.12	
4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	04.18~04.19	
5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	04.21~04.22	
6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	04.25~04.26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7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	04.28~04.29	
8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	05.02~05.03	공직유관단체
9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	05.16~05.17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10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	05.19~05.20	
11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	05.23~05.24	
12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	05.26~05.27	공직유관단체
13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	05.30~05.31	
14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	06.09~06.10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15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	06.13~06.14	
16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	06.16~06.17	공직유관단체
17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	06.20~06.21	
18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	06.23~06.24	
19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	06.27~06.28	대학
20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	06.30~07.01	공직유관단체

* 상기 계획은 모집 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폐강될 수 있음

○ **[(전문)남부센터]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과정 상반기 교육일정**

※ 2일 14시간 집합교육(비숙박)

연번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	교육대상
1	[1차 모집] 2.22(월)~3.8(화) 18:00	(남부)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1기	03.31~4.01	남부지역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청포함), 공직유관단체 ※ 학교 및 대학 제외

* 상기 계획은 모집 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폐강될 수 있음

○ [(심화)고양캠퍼스]성희롱고충상담원 심화과정 상반기 교육일정

※ 사전 사이버학습 이수+1일 집합교육

연번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	교육대상
1	[1차 모집] 2.22(월)~3.15(화)18:00	성희롱고충상담원 심화교육 1기	06.24	국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대학 내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자 및 경력 2년 이상자

* 상기 계획은 모집 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폐강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

○ 전문교육(2일/14시간)

시 간	1일차	2일차
09:00 ~ 10:00	■ 등록 및 교육안내(1h)	성희롱 방지조치의 이해(1h)
10:00 ~ 11:00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2h) - 개념이해, 인지력 점검 등	성희롱 고충상담 실제(2h) - 역할이해, 상담, 접수
11:00 ~ 12:00		
12:00 ~ 13:0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13:00 ~ 14:00	조직문화와 성희롱(2h) - 조직문화 속 성희롱발생원인 - 기관 및 관리자의 역할 등	성희롱 사례를 통한 역할 훈련(3h)
14:00 ~ 15:00		
15:00 ~ 16:00	성희롱 사례분석(2h) -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및 사례분석	■ 평가 및 마무리(1h)
16:00 ~ 17:00		

* 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화교육(사전사이버교육 이수+1일/7시간 집합교육)

사전 사이버학습(100%이수)		시 간	1일차
법적 개념의 이해	=>	09:00 ~ 10:00	■ 등록 및 교육안내
청소년 대상 성희롱		10:00 ~ 11:00	성희롱예방 정책의 이해 (2h)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11:00 ~ 12:00	
조사처리업무의 이해		12:00 ~ 13:00	■ 점심식사(1h)
성희롱고충 상담 실습 1		13:00 ~ 14:00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워크숍 I (2h) : 성희롱 사례 및 판례
성희롱고충 상담 실습 2		14:00 ~ 15:00	
성희롱고충 상담 실습 3		15:00 ~ 16:00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워크숍 II(2h) :비공식적 대응의 사례탐구 및 상황이해 등
성희롱고충 상담 실습 4		16:00 ~ 17:00	
			17:00 ~ 18:00

* 사전 사이버학습 8과목 100% 수강 후, 집합교육(심화) 이수

* 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

- 지자체 공모로 1만8천호 선정, 전국 210곳에 11만호 행복주택 입지확정 -

- 서울·부산시 등 11개 시·도에서 제안한 49곳(1만8천호) 사업 선정
- 국공유지 활용형,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등 사업모델 다양화
- 정부목표(14만호)의 80%수준인 11만호 입지확정
- '15년말 확정 8만8천호 + 지자체 공모결과 1만8천호 + 신규입지 4천호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1만8천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 49곳(1만8천호) 선정, ▲ 18곳(2천호)은 수요, 토지 사용권 등을 추가검토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선정된 49곳 중 43곳(1만6천호)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었으나, '14년 5천호 → '15년 9천호 → '16년(상반기) 1만6천여호 등으로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의 취지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지역의 활력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 ▶ “서울시는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는데, 행복주택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하므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 ▶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금싸라기 市유지에 행복주택 2천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백호 등을 추진 중이며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 “폐광지역에서 관광도시로 탈 바꿈중인 정선군은 젊은 직장인들 주거난이 심각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郡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정선군수 전정환

□ 주요 지자체 별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는 서초·용산·양천 등 15개 자치구에 직주근접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26개 사업(1만1천5백호)을 제안하였고 이들 사업은 SH가 시행하게 된다.

* 서울시 요청으로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표

- 부산시에는 2개 사업에 1.5천호를 추진하며 이를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백호 규모의 중동지구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개발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중동 사업예정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경기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광고 신도시 내 경기도시공사 토지에 행복주택 3백호 건설 등 9개 사업(3천호)이 선정되어 경기도시공사, 성남시 등이 시행하게 된다.
- 제주도는 용담일동 도유지에 행복주택 1백호 건설 등 5개 사업(3백호)을 제주개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

시 도	계	행복주택 소재 시군구
계	18,132호(49곳)	
서울 ●	11,534호(26곳)	▶ 서초구, 용산구, 양천구, 광진구 등 15개 구
인천	30호(1곳)	▶ 서구 ●
경기	2,948호(9곳)	▶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파주시
부산	1,493호(2곳)	▶ 해운대구, 기장군
대전	40호(1곳)	▶ 유성구
경남	150호(1곳)	▶ 함양군
경북	1,000호(1곳)	▶ 포항시
전남	150호(1곳)	▶ 여수시
전북	300호(1곳)	▶ 정읍시
강원	150호(1곳)	▶ 정선군
제주	337호(5곳)	▶ 제주시

* 지자체 공모 미참여 시·도 : 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이와는 별개로 지난 연말 이후 지자체 협의, 제21차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신규로 확정된 주요입지는 다음과 같다.

- 과천지식2는 지식정보타운 내 신설역(‘20년 개통예정)과 인접한 부지에 행복주택 837호 건설

- 대구읍내는 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 건설
 - 제주혁신은 교육연수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곳에 200호 건설
 - 이외, ▲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20년 개통예정]), ▲ 고양향동(500호, 수색역 인근), ▲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 대구도남(600호, 칠곡경대병원역 인근), ▲ 광주본촌(80호, 광주첨단과학산단 인근) 등 8곳(3,217호)이다.
- 이로써 행복주택 부지는 ‘15년까지 확정된 8만8천호(153곳)에서 11만호(210곳)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지도 1만4천호(47곳)에서 3만호(90곳)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11만호 부지에 대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도별 분포현황 >

시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시도	지구수(곳)	세대수(호)
수도권	서울	50	21,159	충남	8	6,252
	인천	9	6,154	충북	5	2,154
	경기	66	40,280	경남	11	4,916
	부산	9	6,313	경북	3	2,197
	대구	7	4,206	전남	3	800
	광주	9	4,147	전북	4	1,857
	대전	10	3,372	강원	3	730
	울산	3	1,846	제주	8	863
	세종	2	1,950	합계	210	109,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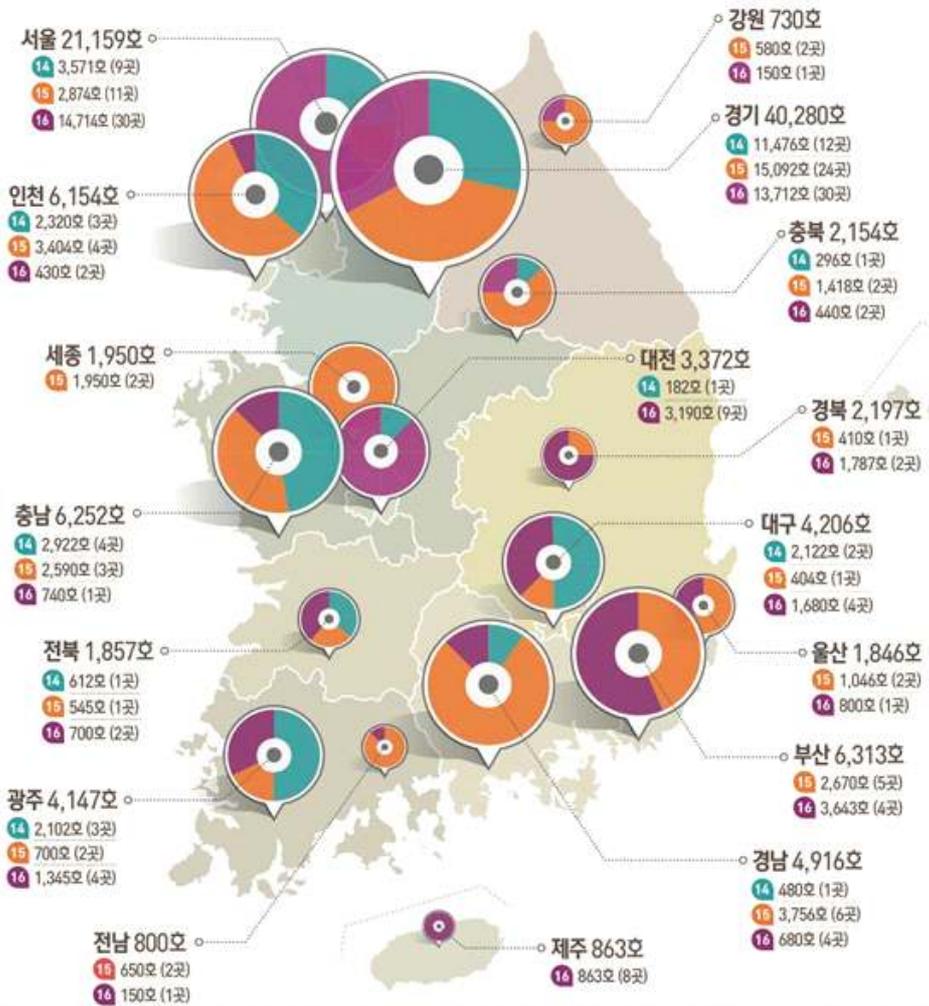
- 한편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로드쇼’를 2.24일 부산광역시,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하고,
-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지방공사 대상 2차 공모」를 시행하여 ‘17년 사업지구로 1만여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14 ~ '16 행복주택 추진현황



행복주택 총세대수
109,196(210곳)

2014년	26,083(37곳)
2015년	38,089호(68곳)
2016년	45,024호(105곳) + α



14 2014년 승인지구 15 2015년 승인지구 16 2016년 추진지구

1 국유지

-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 동래역(철도 부지)에 행복주택(395호) 건설



2 공유지

- SH에서 서울신내 공용주차장에 행복주택(209호)과 주차장 복합건설



3 도시재생용지

- 광주도시공사에서 불량 주거지 정비화 함께 행복주택(500호) 건설



4 공기업토지

- SH에서 서초 내곡지구 내 공기업 보유토지에 행복주택(87호) 건설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대책 시행
- 범정부 해사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계절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 안전대책이다.

이 계획은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보장’을 정책목표로,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선박 안전성 강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의 59개 세부이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봄철·해빙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3월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봄철은 안개와 갑작스러운 해상기상 변화로 인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어선조업과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봄철 해빙기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국제여객선 29척, 낚시어선 1,266척, 연안여객선 155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안전설비 관리 등 기초 안전설비와 운항수칙의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항만 및 어항 등에서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구명조끼 상시착용 운동과 더불어 낚시객, 수상레저인 등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소유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이 라이프 재킷(My Life-Jacket)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양안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소형선박에서의 지켜야 할 필수 기초안전 수칙 포스터 7만 여장을 배포하여 선박운항자와 선주 등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안전관리가 한층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형선 종사자들을 위한 모바일 해사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소형선박 종사자 중 50세 이상의 선원 비중은 77.7%에 이르고 있으며, 약 64%가 휴대전화를 통해 항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 서비스'와 외교부의 '해외여행안전정보 문자 서비스'와 같이 다중이용선박, 어선, 연안화물선의 선주, 선장 등 약 6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수적 해양안전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해사 정보 네트워크'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기초적 안전 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상종사자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참고 1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 개요

1.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목표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추진
방향

- ① 인명안전 최우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 ②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대형인명사고 ZERO화
- ③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전략

세부 추진 사항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원(외국선원, 어선원 포함)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해기면허 취득요건 개선 및 해사전문인력 양성
- 선원(외국선원 포함)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선박 안전성 강화

- 노후선 검사 강화 및 대체 추진
- 중소유조선 등 내항선박 안전점검 강화
-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스마트
해상교통환경 구축

- 항행위해요소 발굴·개선 및 불법어망·장애물 제거
- 항만 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 해상교통 관련 인프라(e-NAV, VTS, AtoN, 해도) 확대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해사안전 국제규범 국가대응력 강화
- 해적, 항로표지 관련 양다자·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
- 해양수산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대국민 해양안전 생활화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및 위기관리체계 정비
- 해양방제(HNS 포함)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 해적피해 예방체계 강화 및 선박 보안관리 강화

2. 5대 핵심과제

◆ '16년 해양안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 '16년 6개 전략 59개 추진과제 중 정책 중요도를 기준으로 5개 과제 선정

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공통 적용

* 안전제도혁신, 안전기준강화, 운항환경개선, 안전문화확산 4개분야 22개 과제 추진

② 대국민 기초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 공익광고 제작·방송, 해양안전 기초 안전체험관 개설 등 스스로 지키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③ 기본에 충실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립

- 부처간 합동안전점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 안전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지속적 이행을 위한 안전정책 환경 조성

④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선박안전성 확보

-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정밀분석, 유조선 통항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선종별 안전대책* 이행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등

⑤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 주도를 위한 국내·외 기반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 국제해사학회 창립,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봄철(3~5월)은 잦은안개 등 기상요인 변화, 행락철·성어기 선박 교통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

☞ 봄철 기상 및 해양사고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운영기간/참여기관 : '16.3.1 ~ '16.5.31(3개월) / 유관부처,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

□ 주요추진과제

○ 해상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공통) 농무기 대비 항해 중 경계 철저, 필요시 경계요원 추가배치 등 경각심 고취 및 안전속력 준수, 레이더 사용법 등 집중교육
- (다중이용선박)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비상시 승객안전 확보 요령, 인공호흡 등 인명구조 및 무선·안전설비 사용방법 등 교육실시

○ 경영자(CEO) 대상 안전의식 제고 교육 추진

- (선사 경영층) 선사 최고 경영자·안전관리책임자 대상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부산지역 선사 CEO 등 경영진 대상 간담회(4월 예정) 시 해양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별도교육 실시

○ 선종별 취약요인 점검·검사 강화

- (다중이용선박) 국제·연안 여객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지자체,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원 등) 실시

* 대상 : 국제여객선 29척, 낚시어선 1,266척, 연안여객선 155척

** 점검내용 : 과적·과승, 안전설비 관리, 운항수칙 준수 및 항해등(燈), 무중 신호, 레이더 등 항해설비 정상작동 여부

- (카페리 화물선) 내항화물 운송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화물적재 및 고박 적정성에 대한 지속점검 실시(해사안전감독관)

○ 해양수산 분야 시설물 민·관 합동점검

- (여객선 터미널 등) 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점검(연안터미널 20개소, 국제터미널 5개소 등) 이행

- (주요시설) 항만구역 내 위험물 하역시설(41개소), 항로표지, 항만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민관합동점검*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 시설운영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항만공사, 항로표지협회 등

○ 해양안전정보 적시제공 체계 구축

- 선박소유자, 선장, 안전관리자 대상 필수 해양안전 정보(기상악화, 계절별 안전정보 등) 모바일 해양안전 네트워크(SMS) 구축

* 대상/운영시기 : 소형선(어선) 선장 및 선사 안전관리자 약 7만여명 / 3월(시범운영)

- 조업·항해 중인 선박에 기상·안전정보 제공(국민안전처 VTS, 어업무선통신국, 운항관리실) 및 시계제한 시 출항통제* 철저

* 내항 여객선 : 1km 이내 / 내항 화물선 : 0.5km 이내 / 어선 : 통제 비대상

○ 해양안전문화 개선활동 추진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운영 및 "My-LifeJacket 캠페인" 등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집중실시

*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한 주요항만, 어항 등 현장캠페인 실시(10회)

- 소형선 운항자를 위한 '선박운항 필수안전수칙' 제작·배포(7만부)

* 필수안전수칙의 반복적인 숙지를 통해 최소한의 운항안전 준수 계도

- 운항자의 자체 안전점검 일상화 유도를 위한 "소형선박용 출항 전 안전운항 점검표*" 배포(수상레저협회, 선박검사기관, 수협 등 배포)

* 선체 안전성 및 주요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점검 자료




5+1

해양안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01


운항수칙 |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은 절대 안돼요!!

02


안전교육 | 출항선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은 하셨나요?

03


견시강화 | 선박운항 시 항상 전방을 주시 하세요!!

04


사전점검 | 출항전 필수장비의 안전점검은 하셨나요?

05


인명안전 | 구명조끼는 착용 하셨나요?

+

낚시어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 합니다.



유·도선

승객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레저보트

비상연락수단을 반드시 확보 합니다.



기타선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